

野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공임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김종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토론회...이재명 “예산 삭감돼 주택 확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중”·“건설사 특혜는 경계” 의견 등

더불어민주당은 31일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공공주택이 부족해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면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아주 썩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공공임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매입 대상은 아파

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모델해저드, 건설사 편들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를 기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추경으로 매입임대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 급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으나 추경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주택 매입에 집중되다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는 가격 하방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비명계 끌어안기’

연구모임 첫 토론회 참석해 축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비명(비이재명)계와 접점을 늘리며 당내 통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당내 분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다중의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검찰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이뤄지면서 당내 결집을 현실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길’ 주최 첫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토론회 참석을 두고 ‘비명계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등 분열 조짐이 가시화하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자당 동료 의원 168명은 물론 전국 각지 원외 지역위원

원장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린 것도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지도부가 오는 4일 서울에서 장외투쟁 성격의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배경에도 당을 단일 대오로 재정비하려는 전략이 담긴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는 승례문 앞에서 예정된 장외집회 무대에 올라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맹비판할 걸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것도 당의 단합과 결속을 당부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비명계 출신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계속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날아갈 것에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며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자 통합과 결집을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공감이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안철수 60.5% vs 김기현 37.1%

한국갤럽 조사...국민의힘 지지층 가상 양자대결

국민의힘 3·8 정당대회의 결선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섰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지난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 결선투표 양자 대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안 의원은 59.2%의 지지율로, 김 의원(30.5%)을 28.7%포인트(p)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9%포인트) 대상 조사에서도 안 의원의 지지율은 60.5%를 기록하며 김 의원(37.1%)보다 23.4%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 안 의원은 대구

·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각각 58.7%, 57.2%를 기록했고, 김 의원은 38.1%와 38.9%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안 의원(서울 59.5%, 인천·경기 58.4%)이 김 의원(서울 35.6%, 인천·경기 40.8%)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진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34.6%), 안 의원(28.4%), 김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3.8%), 조경태 의원(1.6%), 윤상현 의원(0.7%) 등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 “검찰 ‘김건희 의혹’ 수사 안해 특검 불가피”

원내대책회의...박홍근 “김 여사 대통령으로 착각 의구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김 여사는) 언제 조사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의 구심이 들 만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

통령의 역린이 확실해 보인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 영향력이 막강하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추가적인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대통령실이 아닌) 김 여사가 고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논문표절 의혹 등을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걸 왜 고발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 강화의 일환으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태세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검찰의 수사행태 때문이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는 점이 장애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만 성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9~10개월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정기 라운지

“DJ센터 사장, 직장내 괴롭힘 공식사과해야”

채은지 시의원 촉구

광주시의회 채은지(민주·비례) 의원은 지난 31일 “김상목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김 사장은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격을 반복적으로 침해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장은 “광주시 감사 결과 이후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리 감독 부서인 신활력추진

진분부의 김준영 본부장은 “엄중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 부서로서 특별업무감독을 진행해 관련 자료는 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사장은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 의혹과 지인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최권일 기자 cki@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 ▶ 중심 상업지구
-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융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